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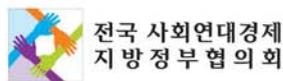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0 사회적 가치 포럼

▮ 일시: 2020년 2월 20일(목) 18시

▮ 장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주최 · 주관:



후원:



목 차

-프로그램-	1
-환영사-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 서울 성동구청장	5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7
-주제발표-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9
〈한국사회와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실현 - 의미와 전망〉	
-토론-	
[정부]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21
〈정부의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노동] 정흥준 공공상생연대기금 연구운영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29
〈한국사회와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실현〉	
[언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33
〈국회와 언론은 왜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없을까〉	
[시민사회] 염형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	39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구체적 성과로 답해야〉	
[사회적 경제]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43
〈시민사회 강화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부록-	
부록1. 2019 LH 사회적 가치 추진성과	47
부록2. 신용보증기금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57
부록3. 공유자산으로서 대학, 대학사회책임	63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0 사회적 가치 포럼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8:00 ~ 18:30	30'	등록 참가자 저녁식사 및 환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등록 (사전등록 확인 포함) ※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발열 검사 등 진행 ▶ 간단한 저녁식사(샌드위치 등)와 함께 참석자 환담 (VIP 대기실 및 행사장)
18:30 ~ 18:45	15'	개회 및 환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서울 성동구청장
		참석자 소개	주요 내빈 소개
18:30 ~ 18:45	15'	인사말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18:45 ~ 18:50	5'	기념촬영	
18:50 ~ 19:15	25'	주제발표	<p>한국사회와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실현 - 의미와 전망(가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9:15 ~ 20:10	55'	패널토론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찾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 [공공기관] 라영재 (전)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노동] 정홍준 공공상생연대기금 연구운영위원/한국노동연구원 - [언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 [시민사회] 염형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 - [사회적경제]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0 ~ 20:30	20'	종합토론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과제
20:30		폐회	

※ 프로그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상생과 연대의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싹트기를 소망합니다.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이병훈



우리 사회에 공공성·상생·연대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준비한 뜻 깊은 자리에 발걸음해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노동, 종교, 학계, 정치 등의 울타리를 넘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모색하는 유의미한 공론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우리 재단을 비롯하여 모두 네 곳의 공동주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정책기획위원회와 양대노총의 후원으로 오늘의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자리에 우리 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시고, 함께 행사 성사를 위해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우리 사회에 상생과 연대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앞장서고 공공기관 임직원이 동참하여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 창립 후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재단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상생과 연대의 따뜻한 손길을 펼치기 위해 공익단체·공공기관과의 파트너 사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장학사업과 대학동아리 지원사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사회공공성 확대라는 재단의 설립목적과 미션을 위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제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공공포럼을 개최해온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성찰하고, 그에 따른 공공부문의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숙의와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재단이 여러 활동을 통해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상생과 연대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오늘의 포럼이 좋은 양분이 되어, 다가올 봄에는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변화가 싹트고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사회적 가치 포럼 환영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0 사회적 가치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협의회는 2013년 창립 이후부터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운영원리가 되도록 여러 주체들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사람중심의 경제인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과 민간에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제정 추진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나름의 기여를 해왔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그 길에 한 가지 결실을 더하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의 캐치프레이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찾다’입니다.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길은 감히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같이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해 사람중심 포용사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상생경제의 4대 실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 조직 구조·문화 개선,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구현 등이 제시되었고,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경제 성장 가속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 흐름이 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기관들과 부처들은 공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가장 고민하고 노력해 온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두주자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확산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뜻깊은 이번 행사를 저희와 함께 주최, 주관해주신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후원해주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행사에 자리하셔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을 실어주신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님,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님,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님,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님,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님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님과 패널로 토론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부처들이 서로 융합하고 협력하여 만드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나라,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더욱 따뜻하게 비춰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사회적 가치 포럼 환영사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송경용 신부



미래로 나아가려는 대화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스무 해가 지났습니다. 사회시스템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 경제적 성장이 우리를 어떤 사회로 데려다 줄 것인지 궁금해하며 기대와 우려의 교차로를 오가던 시기를 지나 기후변화와 심화된 불평등 앞에서 무력감을 떨쳐내기 힘든 202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것은 물러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이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회적 합의 기구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는 성찰을 통해 여러 종류의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고 운영해왔으나 참여 주체 간 불신이 해소되기 보다는 대치의 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계층과 세대, 지역 간 불평등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철 지난 유물로 취급했던 이념과 진영의 대결은 오히려 광장을 점거하며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발시대가 남긴 유산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장중심 이론과 방식, 획일화, 우상의 시대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찰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과거의 유산이 아직도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치관, 세계관, 생활문화를 부정적으로만 부정하는 것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막연한 희망을 품는 것, 모두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우리 모두의 역사이며 미래 역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섞인 이 혼란한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규범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은 성장과 이념, 이상, 독점, 물신의 시대에서 생명, 안전, 평화, 행복, 참여, 공존, 다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미래를 희망하며 ‘대화와 협력’의 자리에 목말라 하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통해 노동, 종교, 시민, 학계, 언론, 정치, 기업인 등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각계의 인사들이 모여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가운데 불신과 혼돈의 강을 건너 미래로 넘어갈 수 있는 가치와 규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사회와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실현

- 의미와 전망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와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실현 - 의미와 전망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2020년 1월 15일 발표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오늘 발표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공공성이란 무엇인지를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어떻게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양립가능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안전문제에 대한 집중적 조명이다.

1. 공공성이란 무엇인가¹⁾

공공성의 개념적 토대는 크게 공익을 위해 사회적 부담과 혜택을 분배하는 문제와 공공의 의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합의를 이루는 문제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앞의 것은 공공재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차원을, 뒤의 것은 공익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적·정치적 차원을 말한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앞의 것은 경제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재 생산을 둘러싼 자원 공유 및 배분 방식을 말하고, 뒤의 것은 정치적 차원으로서의 공동의 이익을 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제적 차원의 공공성에는 공익성과 공정성이 핵심적 내용을 구성한다. 공익성이라 함은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국가와 사적 영역의 자원 투입 및 배분 상태를 말한다. 공정성은 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배 및 재분배의 형평성 정도를 말한다. 정치적 차원의 공공성에는 공민성과 공개성이 핵심적 내용을 구성한다. 공민성이란 공동의 이익과 관련한 내용,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 역량과 제도화 수준을 말한다.²⁾ 공개성이란 공익과 관련된 의사표현의 자유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말한다. 이처럼 공공성은 공익성, 공정성, 공민성, 공개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의 총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네 가지 구성요소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공공성의 성격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위 영역 구분 및 그 정의에 따라 공공성의 각 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공익성’은 복지, 교육, 의료 부문에서 사회적으로 이들 부문에 투입되는 자원 가운데 국가의 자원 투입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이외

1) 필자와 공동연구자들은 단행본을 통해 이 주제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는 장덕진 외(2015)의 내용을 요약 및 전제한다. 장덕진 외 2015.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 도서출판 한울.
2) 공민성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낯설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조대엽에 따르면 “‘국민’은 근대 국민국가적 경계와 함께 하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적 대상이 강조되는 반면, ‘시민’은 이를 넘어서는 공공적 기능의 담당자이자 주체로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나아가 “공공성의 범주가 일국적 수준을 넘어 지구적 수준에서도 설정되기 때문에 공적 ‘시민’으로서의 공민이 강조되는 것”이다. (조대엽, 2012.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공공성의 구조” 『한국사회』 제13권 1호. 3-62쪽.

개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익적인 활동에 얼마나 투입하는지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공정성’은 한 사회의 자원 배분 상태의 형평성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분배 결과에 보다 중심을 두는지, 아니면 분배 기회에 보다 중심을 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배경 등에 따른 소득, 고용, 교육성취, 건강상태 면에서의 분배 격차와 국가가 공익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에게서 마련한 재원인 조세가 어느 정도 그 사회의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공민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참여의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들의 수준과 그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 시민권, 정당 활동, 입법 활동, 이익단체와 시민 참여 역량 등과 관련한 지표들을 통해 민주적 참여의 실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끝으로 ‘공개성’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에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매체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의사결정과 정책 실현과정에서의 투명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위에 설명한 공공성의 네 가지 구성요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1항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을 풀어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크게 두 가지의 이념, 즉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기틀 위에 선 나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공민성과 공개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이고 공익성과 공정성은 공화주의의 핵심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공공성을 높인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충실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 1>은 위의 네 가지 구성요소에 근거해 측정한 공공성의 수준을 OECD 국가에 대해 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한국은 30개 국가 중 30위에 해당하는 낮은 공공성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공공성 제고의 필요성이 절박하다. 순위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성의 유형인데, <표 1>의 자료를 가지고 집락분석(cluster analysis)에 의해 유형구분을 해보면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유형 1과 2는 공익을 실현하는데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하며,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분배와 재분배에 적극 개입한다는 점에서 공화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반면 유형 3과 4는 국가보다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순위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	공민성	공개성
노르웨이	1	3	1	3	1
스웨덴	2	6	2	1	3
핀란드	3	5	3	4	2
덴마크	4	4	6	2	4
룩셈부르크	5	1	14	7	6
뉴질랜드	6	2	10	9	8
아일랜드	7	7	9	18	11
스위스	8	25	7	10	5
아이슬란드	9	16	4	13	12
네덜란드	10	11	8	14	13
독일	11	15	18	6	9
벨기에	12	10	11	12	18
이탈리아	13	9	5	22	29
호주	14	21	17	8	14
오스트리아	15	8	22	16	21
체코	16	13	24	20	10
캐나다	17	23	16	11	17
슬로베니아	18	12	12	24	20
폴란드	19	18	21	15	16
스페인	20	14	13	19	27
영국	21	22	20	17	15
프랑스	22	17	15	23	25
미국	23	29	29	5	7
포르투갈	24	20	26	25	23
이스라엘	25	24	28	21	19
그리스	26	28	19	27	22
슬로바키아	27	26	27	26	24
헝가리	28	19	23	30	30
일본	29	27	25	28	26
한국	30	30	30	29	28

<표 1: OECD 30개 국가의 공공성 및 하위영역별 순위>

출처: 장덕진 외. 2015.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 도서출판 한울.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해당 국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일본, 한국, 이스라엘, 미국
공익성	국가 중심	○	○		
	시민사회 중심			○	○
공정성	분배결과의 평등성	○	○	X	X
	분배조건의 평등성	○	X	○	X
공민성	제도화 수준	○	△	○	X
	실질적 참여 수준	○	X	○	X
공개성	정보접근성	○	X	○	X
	투명성	○	X	○	X
공공성 성격 규정		참여적 공화주의	배제적 공화주의	포용적 자유주의	배제적 자유주의

<표 2: 공공성 유형구분 및 성격규정>

출처: 상동

그러나 똑같이 공화주의 성격이 강하더라도 유형 1과 2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유형 1은 높은 공개성을 바탕으로 공공 영역에 대한 실질적 참여 수준이 높은 반면 유형 2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공익 실현 정도는 강하지만 실질적인 시민 참여 수준은 낮다. 분배조건의 평등성이 낮고 정보 공유 및 투명성도 낮아서 공공성의 민주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유형 3과 4는 자유주의적 특성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로 역시 차이를 보인다. 유형 3은 4에 비해 민주주의의 제도화 수준이나 실질적 참여 수준이 높고 공개성과 투명성이 높다. 다시 말해 시민의 공익 실현 참여를 위한 민주적 기반이 강한 것이다. 반면 유형 4는 자원 배분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이 제도적·실질적 기반이 모두 취약하다. 한국은 바로 이 유형 4에 속한다.

<표 1>과 <표 2>를 합쳐보면 한국은 순위별로는 공공성 수준이 매우 낮으면서 유형별로는 배제적 자유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낮은 공공성 하에서 시민들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도생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 수준을 높이려는 사회적 가치 제고의 노력과 포용국가의 국정 방향은 한국이 가진 공공성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눈여겨 볼 일이다.

2.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관계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정책에 관여하다 보면 제일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다. “경제적 가치는 알겠는데, 사회적 가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사회적 가치에 예산을 얼마나 ‘할당’해야 좋을까요?”이다. 우리는 빠른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모두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공공의 영역’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왔고, 그 결과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 자체를 생경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나 이 절에서 설명하듯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분리되어질 수 없다.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가치가 높아질 때 비로소 경제적 가치의 실현이 더 쉽게 더 높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낮은 공공성은 직접적인 경제적 대가를 요구한다. 공공성과 1인당 GDP는 매우 뚜렷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공공성의 증진과 공동체 복원 없이 경제만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낮은 공공성은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불평등을 높인다. 불평등을 낮추지 못하면 공공성을 높일 수 없고, 공공성을 높이지 못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배후에는 ‘저성과 균형(low-performance equilibrium)’이 있다. 일이 진행되어서 성과가 나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유 업무영역에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헌신을 해서 ‘공유지’를 채워주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성이 낮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런 헌신을 하려 하지 않고 자신만의 영역에서 머문다. 면접 때는 최선을 다할 것처럼 보였지만 일단 채용되면 2년 후 일자리 찾기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의 사례이다. 모두가 자신의 영역에서만 머물면 공유지는 채워지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고, 성과는 낮아지며,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 이것이 문제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자기가 먼저 헌신하려 하지는 않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다. 낮은 성과 상태에서 변화할 수 없는 ‘저성과 균형’인 것이다.

공공성 증진을 위한 사회적 가치가 이처럼 중요한데, 이와 동시에 우리는 정책 수용자의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어린 시절 과학 시간에 배웠던 용질, 용매, 용액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좋은 정책이 용질이라면 정책 수용자의 특성은 용매이다. 같은 용질도 어떤 용매에 섞느냐에 따라 다른 용액이 만들어지듯이, 같은 정책이라도 정책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얻어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가치의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사회적 가치에 재정을 쓰는 것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증세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국민들도 반발할 수 있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등 다양한 국제비교 자료를 통해 보면,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OECD 최고 수준으로 ‘물질주의’에 치우쳐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성장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물질주의이고 사회적 가치에 해당하는 인권, 평화, 환경 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탈물질주의인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탈물질주의자들이 45-48%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5%에 머물고 있다. 자칫 사회적 가치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정책 수용자의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 사회적 가치가 단순히 부가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혁신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다른 것이 아니다. 경제적 가치의 효율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합의의 틀이 바로 사회적 가치이다. 제조업 전성기에 모범적인 복지국가와 동시에 경제강국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나 스웨덴의 샬트셰바덴 협약과 같은 사회적 합의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만연하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까. 여러 예측이 있는데, 적게는 9%에서 많게는 47%라고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측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질지 예측하는 것보다는 잘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200년 전 산업혁명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 1800년대 초반 영국의 노동자들은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다. 200년이 지나 돌이켜 보면 산업혁명의 결과는 일자리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수의 노동자를 중산층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결과가 얻어진 것은 아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을 사회적 합의의 틀 안에 길들이기 위해 수많은 혁명과 내전, 전쟁을 겪었고 그런 희생을 대가로 해서 유례없는 중산층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을 사회적 가치의 틀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합의한 나라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뒤쳐졌다. 이제 200년이 지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더 큰 기술변화의 길목에서, 지나간 200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할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경제·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 가치는 혁신의 토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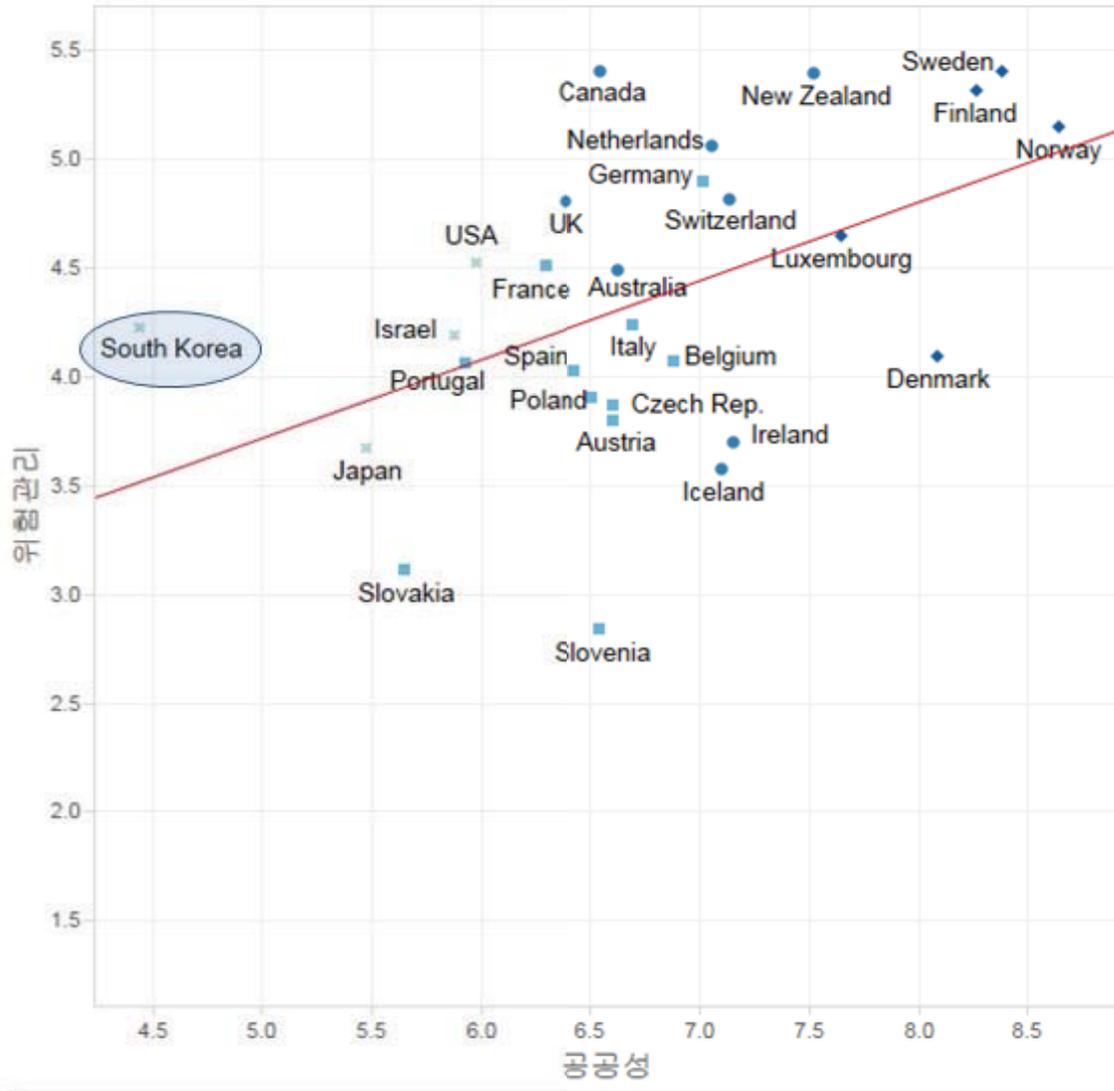
3. 가장 시급한 사회적 가치: 재난과 안전

이번에 발표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은 4대 실현방향과 13대 세부 사회적 가치를 밝혀놓고 있다. 4대 실현방향은 ① 사람 중심 포용사회 ②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③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④ 상생경제를 말한다. 이 4대 실현방향과 13대 세부 사회적 가치는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으로서 재난과 안전의 문제를 조명하고자 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것이 노동과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생명을 잃으면 그 후에 어떤 바람직한 변화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안전이란 유명한 매슬로우(Abraham Maslow)의 욕구단계론(hierarchy of needs)에서도 가장 기본적 욕구인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와 안전욕구(security needs)에 걸쳐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³⁾ 즉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의 더 고차원적인 단계로 옮겨가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까. 이유는 낮은 공공성 때문이다. 앞에서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했으니 다른 말로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안전과 공공성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가 뒷받침해주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림 1>을 보면 공공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위험관리 역량이 높아지는 뚜렷한 선형적 관계를 볼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공공성이 낮으면 그만큼 더 위험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안전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협력할 때에만 얻어지는 공공재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공익을 희생해서 이익을 추구한다면 안전은 확보될 수 없다. 우리가 오늘 이 포럼을 열고 있는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과 조직이 개입되었을 것이다. 그중에 누군가가 자재를 빼돌리고 안전을 위해 정해진 철근의 절반 밖에 넣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입찰만 하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의 대부분을 나눠먹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절반만 고용했다면, 누군가가 눈가림으로 준공검사만 받고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했다면,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고용해야 할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 파견에 의존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밀어붙였다면,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안에서 이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셈이 된다. 우리가 안전하려면 이들 모두가 공익을 위해 정해진 규칙을 지켰어야 한다.

3)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할 것부터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소속감의 욕구, 자부심의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로 나아간다.



<그림 1: 공공성과 위험관리 역량의 관계>

낮은 공공성, 즉 낮은 사회적 가치가 안전을 위협하는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게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도대체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 수많은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외 없이 낮은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다. 선령 21년의 세월호는 어떻게 한국에서만 운항할 수 있었나? 무분별한 규제완화 때문이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규제도, 맹목적인 규제완화도 바람직하지 않고 적정규제의 선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연안 여객선의 선령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유병언 일가는 어떻게 비정상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나? 해수부, 한국선급, 여객사로 이어지는 이익 공동체가 눈을 감아주었기 때문이다. 해경은 왜 정상적인 모니터링과 구조활동을 할 수 없었나? 평소 안전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습관과 제도, 그리고 시장의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핵심 기능을 민영화 해온 결과이다. 청와대는 왜 스스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했나? 신자유주의 국가가 국민의 안전이라는 국가의 핵심

적 의무를 떠안기를 거부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은 왜 그토록 더디게 진행되었는가? 정치가 공공성을 거의 완벽하게 상실하고 재난조치 정파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는가? 수많은 생명에 대한 애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이지만, 동시에 체험으로 알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이런 일은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는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일본은 한국 다음으로 낮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재난 상황에서 매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성이다. 공공의 정보가 공익을 위해 공개되지 않고 소수의 의사결정자 내지 이익집단에게만 공개되는 현상이다. 후쿠시마 사태 때 일본 언론의 보도는 크게 두 가지로 채워졌다. 하나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달래기 식 보도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겨냅시다”는 연대감 조성을 위한 보도였다. 그러나 막상 필요한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일단 국민들은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그 심각성 자체를 제 때에 알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국제 원자력 사고 평가척도(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INES)의 레벨 4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으나, 일주일 후인 3월 18일에는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랜드(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 수준인 레벨 5로, 4월 12일에는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레벨 7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언론은 앞서 소개한대로 ‘달래기’와 ‘연대감 조성’만을 반복해서 국민들은 심각성 자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있는 동안 일본 바깥에서는 레벨 7로 조정되기 3주 전인 3월 24일에 이미 방사성 요오드 131과 세슘 137의 방출량이 각각 체르노빌의 73%와 6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뉴 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에 실리고 있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막상 가장 직접적 피해자인 일본 국민들만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가 하면 스피디(System for Prediction of Environmental Emergency Dose Information: SPEEDI) 사건은 또 하나의 예이다. 일본 정부는 스피디 시스템을 통해 방출된 방사능의 이동경로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사고 발생 이후 한달반이 지난 4월 26일 되어서야 예측 결과를 공개했다. 문제는 예측 결과 방사능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던 방사선 형태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주로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점이였다. 방사선 형태 이동을 믿고 사람들은 최대한 후쿠시마에서 먼 곳으로 피신했는데, 이들 중 북쪽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방사능 이동 경로를 따라간 셈이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일본 정부는 4월 26일 발표 이전에 이미 수천번의 확산 예측을 실시해왔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와 요코하마에 정박하고 있는 크루즈선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재난을 키우는 일본의 패턴은 9년 전에 비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사회적 가치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다. 생명을 잃고나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이다. 재난과 관련한 공공성을 높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

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정치적이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재난과 안전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4. 결론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 공공부문은 몇 가지 이유로 가장 선두의 에이전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과정일 뿐,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사회적 가치가 뿌리내리게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공부문이 ‘먼저’ 할 뿐, 사회적 가치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민주주의, 경제성장,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위해 사회적 가치는 사회 모든 부문에 뿌리내려야 한다. 마치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민간 기업에는 강요할 수 없지만 공공부문은 자동차 2부제를 강제로 시행하듯이, 사회적 가치가 민간과는 상관없고 공공부문만 해야하는 무엇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해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가치의 추구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 ‘일상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공공성 유형구분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배제적 자유주의’ 사회에 머물러 있는 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없다. 둘째,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구분되지 않는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고 여력이 있으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틀 안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꾸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혁신과 시장의 작동을 도와야 한다. 셋째, 안전은 비용이 아니다. 공공부문이 성과주의에 얽매인다면 사회적 가치가 자리잡을 공간은 없다.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에 대한 안심할 만한 투자를 통해 오히려 성과가 좋아진다는 점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정부의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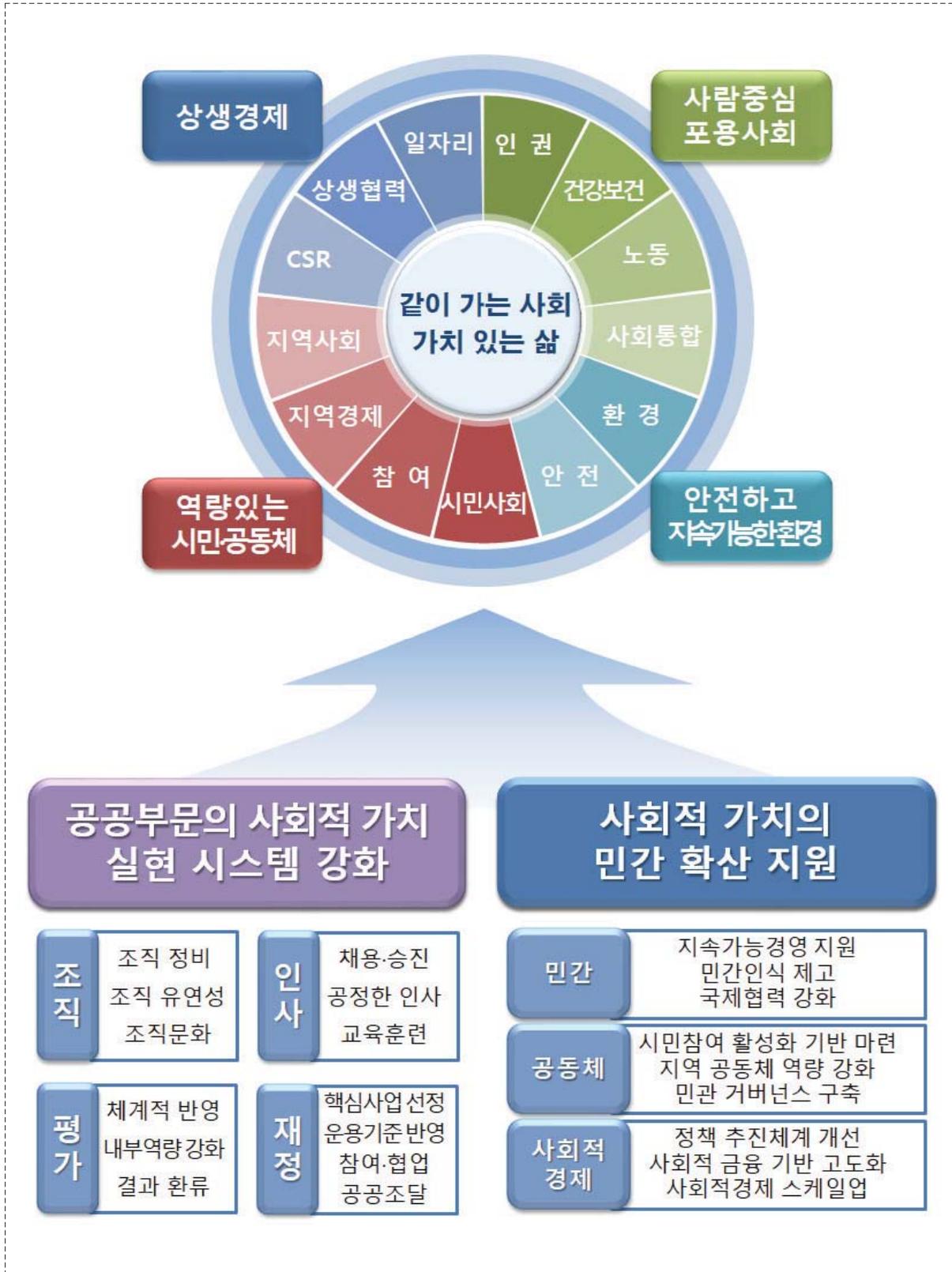
(기재부 사회적경제과)

1 그간의 추진 경과

- (성과) 現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 민간에서도 기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활동 전개
 - (정부)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그간 정책 추진기반 마련과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
 - * (국정과제 12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3대 기본법* 제정(국회 계류중) 추진
 - * 사회적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 ** 사회적가치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평가 등 구체적인 작동체계를 포괄
 -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민간) 기업,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관련 활동 전개
- (한계) 주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정책방향 제시는 미흡했으며, 국민은 공공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
 - 주요 분야에 사회적 가치 반영을 강화했으나, 부분·개별적 추진으로 체계적 정책방향 설정과 전반적 인식공유는 미흡
 - * 현행 소관 개별법에 근거, 13대 세부가치별 개별적인 중장기 비전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실행력에 한계
 - 국민들은 사회문제가 심각하나, 사회적 가치 실현 수준과 실현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
 - * 사회적 가치 대국민 인식조사,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19.5, 심각성(1~5점) : (저출산·고령화)4.36 (환경)4.28 (일자리)4.21 (대·중기 격차)4.20 등

⇒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

2 사회적 가치 비전 및 추진전략



3 향후 추진계획

◇ 국민체감도 제고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가치별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20년)

*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재정보호 등 지원

◇ 실행 목표별 세부 실행계획 및 정책 추진상황 지속 점검·관리

* 추진현황, 목표 달성, 정책효과 등을 사회적 가치 TF에서 논의

〈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	주관기관	일정
◇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① 조직 구조·문화 개선		
▪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 기반 정비		
- 정부조직관리지침 등 보완	행안부	'20.上
- 현장·민생 공무원 및 조직 확충	행안부	'20년~
-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책임관 등 지정	각 기관	'20.上
▪ 협업·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사회적 유연성 제고		
- 벤처형 조직, 긴급 대응반 협업 정원 등 운영 활성화	행안부	'20년~
- 국민 참여 조직 진단 실시 확대	행안부	'20년~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확대 유도	기재부	'20년~
▪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조직 문화 확산		
-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경진 대회 등 실시	각 기관	'20년~
- 적극 행정 이행 점검 및 평가	인사처	'20.1월
②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 공무원 등 채용·승진 시 사회적 가치 고려 강화		
- 채용·승진 시 사회적 가치·책임 평가 강화	행안, 인사	'20년~
- 성과 평가를 경쟁·개인→협업·조직 중심으로 전환	행안, 인사	'20년~
- 공공기관장 사회적 책무 명시 및 리더 역량 제고	기재, 행안	'20년~
▪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인사 관리 도모		
- 지방공기업 등 채용 비리 제재 강화(법령 개정)	행안부	'20년
-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도입 추진	행안부	'20년~
- 취약 계층 채용 확대 등 균형 인사 확산(자자체·공공기관)	행안, 인사, 기재	'20년~
▪ 사회적 가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 교육·훈련 기관 성과 진단 시 사회적 가치 반영	인사처	'20년~
- 사회적 가치 활동을 공무원 필수 학습 요건으로 지정	인사처	'20년~

〈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	주관기관	일정
③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 평가체계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		
- 재정사업 자율평가지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 의무화	기재부	'20.1월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보강	기재, 행안	'20년~
-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체계 개편	행안부	'20년
-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기재부	'20.1월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방향에 사회적 가치 반영	과기부	'21년
▪ 기관 내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역량 강화		
- 사회적 가치 세부항목별 평가지표 pool 구축	기재, 진흥원	'20년~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기재부	'20년
▪ 컨설팅, 인센티브 등 평가결과 환류 강화		
- 정부혁신 평가 결과 컨설팅 강화	행안부	'20년
-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우수사례 발굴	행안, 교육	'20.下
-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부여	행안부	'20.下
- 포상 수여(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부포상)	기재부	'20.3/4
④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적 가치 핵심 재정사업 선정		
- 핵심 재정사업 선정 관리	기재부	'19.下~
▪ 재정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 원리 강화		
- 예산·기금 지침 개정	기재부	'20년
- 지자체·교육부 금고은행 지정방안 개선	교육, 행안	'19.下
▪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협업 촉진		
- 참여예산제도 내실화	기재부	'20년
▪ 사회적 가치 공공조달제도 강화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조달제도 개선	기재부	'20.上
-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추진	기재부	'19.下~
◇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		
①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지원		
-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플랫폼 구축	중기부	'20.上
-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 개발	산업부	'20.上
-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투자 지원 확대	중기부	'20.上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중기부	'20.上
- 사회적 가치 부분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산업부	'20.下
-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산업별 전문화	산업부	'20.下
-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지원	중기부	'20년

〈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	주관기관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홍보 통한 민간기업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대상 지속가능경영 전문교재 개발 	중기부	'20.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대상 전문가 교육과정 확대 	중기부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인식조사(가칭) 정례화 	기재, 진흥원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기재부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간담회 추진 	행안부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분야 국제협력 및 ODA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DA 기본계획 및 사업심사 시 사회적 가치 반영 	국조실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과의 ODA 협력 프로그램 확대 	외교, KOICA	'20년~
②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 활성화 수준 진단 지수 개발 	행안부	'20.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 우수기관 인증 	행안부	'20.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포인트제 도입 	행안부	'20.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화문1번가-참여예산간 연계 강화 	행안, 기재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지역대학 협력기반 시범사업 추진 	교육부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지역 산단 혁신계획 수립 	산업부	'20.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확산 및 참여제도 보완 	행안부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원 통합포털 	행안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 T/F 구성·운영 	정책위, 기재	'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협의회 구성 	기재부	'19년~
③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기관 체계 효율적 개선 	기재, 행안, 고용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을 고려한 통계 개발 	각 기관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제공 추진 	금융위	'20.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금융 정보 제공 확대(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금융위	'20.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 	기재부	'20.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추가 건립(3개소) 	고용부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신규 건립(3개소) 	산업부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벤처 등에 대한 R&D 지원 	중기부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팝업 스토어, 디자인 컨설팅 등 판로 지원 	산업부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간 이중연합회 설립 허용 	기재부	'20.上

참고

한국의 변화될 모습

□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세부가치별 달성 지표 설정

분야	세부 가치	세부 지표 (예시)
사람중심 포용사회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인권경영 표준지침 마련('20) 피해자 국선변호 인력 확충('18: 17→'22: 25명)
	건강·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수명 연장('16: 73→'22: 75세)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임금근로자 비중('17: 22.3→'22: 18.0%)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빈곤율 완화('17: 17.4→'23: 15.5%)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감축('18~'20 배출전망치의 76% 수준으로 배출허용총량(1,777백만톤) 설정) 환경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20~'22 총 4,775건)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고 사망사고 '17년 대비 '22년 30%이상 감축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시민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20)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모델 확산율¹⁾('22: 70%) SGI²⁾ '시민의 참여역량' 수준('18:5.5→'22: 6.0)
	지역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22) 농·어촌 순유입 90만명 이상('17~'22)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설치 읍면동 지속 확대 ('19: 408→'22: 700개)
상생경제	CSR	<ul style="list-style-type: none"> CSR 활동에 대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지속 확대 (現 연간 100개 내외 → '19~'22년 누적 500개) 중소기업 CSR 컨설팅('19: 30→'20: 200개사)
	상생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반성장 여건 개선('18: 75.2→'22: 78.2점)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자수, 여성고용률 등 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18: 1,343→'22: 1,500만명)

1) 참여 우수사례 도입 중앙부처(시군구 지자체) / 전체 중앙부처(전체 시군구 지자체)

2) 지속가능거버넌스 지수(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배텔스만 재단, 1~10점)

한국사회와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실현

정흥준

(공공상생연대기금 연구운영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사회와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토론문

정흥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공공상생연대기금 연구운영위원)

□ 장덕진 교수님의 발제문의 취지에 대한 대부분 공감함

- 유형1, 2, 3, 4의 구분은 흥미로우면서 국가별 비교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함. 국제 비교를 위한 나라별 제공지표가 얼마나 정확한 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하지만 대체로 우리사회는 유형4(각자도생형)에 해당하는 개인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공익성을 추구하고 공정성, 공민성, 공개성이 약한 것은 정확한 분석으로 받아들여 짐(다만, 일본보다 우리가 약간 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은.....)
-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발제자의 주장에도 적극 동의함. 경제적 성장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며 지속가능성 성장은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 질적 성장을 고려하지 않는 양적 성장은 불가능한 상황. 경제적 가치는 창의성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기반이 중요함
- 마지막으로 재난과 안전에 대한 강조도 공공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데 동의함. 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을 강조하지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미진한 상태임

□ 변화하는 한국사회에 주목하지만 각론이 부족함

- 다행스러운 점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것과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임
-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는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부족하며 기존의 제도들이 사회적 가치로 치환되는 상황도 적지 않음. ‘무늬만 사회적 가치’를 경계해야 함
-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료적인 사회 분위기를 혁신하려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조직문화도 달라지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존중이지,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성의 중요성에 대한 담론 형성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음. 물론 개인에 대한 존중(복지확충, 일-가정 균형 강조, 공정한 채용 등)이 공정성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성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사회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경쟁을 통한 성과창출보다 공공성에 기반한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성과창출의 지속성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지식인, 시민사회, 언론 등의 역할이 중요함

□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담대한 항해를 시작해야

-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는 정부주도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임

1)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 기부 및 봉사활동으로 축소, 왜곡 되는 일이 없어야 함

- 많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실현을 봉사활동이 중심이 사회적 책임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기재부의 경영평가 점수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임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공공재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경제적 성과 프레임에 갇혀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안전한 사회의 기초는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안전을 이룩하는 것임

-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하청노동관계에서 발생하고 이는 고용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사안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
-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많은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하청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회적 논란이 큼.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실시하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관련 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을 추진했으나 어떤 업무가 생명안전관련 업무인지 모호하여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함
-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성과, 비용의 문제를 여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함

- 사회적 담론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 노동, 인권, 평화, 환경 등 탈 물질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플랜은 무엇인가?
-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공공재의 극대화과 활용은 어떻게 가능한가?
- 국가수준의 재단을 막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조 및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달성 등 협소하게 접근해서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움

국회와 언론은 왜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없을까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사회적 가치 포럼 토론문 -국회와 언론은 왜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없을까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로 20대 국회 법률안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등 21인)

2017-10-26 소관위 접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등 51인)

2016-08-17 소관위 접수

김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문재인 의원 등 60인)과 같은 내용이다. 문재인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등 10인)

2019-03-06 소관위 접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등 15인)

2016-10-11 소관위 접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등 27인)

2016-08-17 소관위 접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형수 의원 등 22인)

2016-08-16 소관위 접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들은 모두 ‘소관위 접수’ 상태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운명이다. 국회는 왜 사회적 가치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등(이하 사회적 가치법)을 의결하지 않는 것일까?

많은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소관위 접수 상태에서 폐기된다. 사회적 가치법도 문재인 정부 들어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유가 뭘까? 몇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첫째, 이른바 보수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자칭 ‘자유우파’ 정당들은 사회적 가치법을 사회주의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시장만능주의나 신자유주의 시각에서는 사회적 가치법에 명시된 인권, 안전, 복지, 노동 등의 가치는 사회주의 가치로 비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나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공격하면서 사회적 가치법을 통과시켜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가치법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가 아니다.

사회적 가치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법안을 묶어서 국회 패스트 트랙에 올릴 때도 사회적 가치법은 빠졌다.

2020년 1월 15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이날 아침 <연합뉴스> 경제 부문 뉴스 시간과 제목이다.

08:00:00 [1보] 작년 취업자 30만1천명 증가...2년만에 30만명대 회복 -
08:02:00 [속보] 작년 12월 취업자 51만6천명 ↑...5년4개월만에 최대
08:04:00 [1보] 홍남기 "작년 일자리 반등의 해...양과 질 큰 폭 회복세"
08:04:00 [속보] 작년 고용률 60.9%...22년 만에 최고
08:06:00 [속보] 홍남기 "작년 12월 30대 취업자 27개월만에 증가...매우 고무적"
08:09:00 [속보] 홍남기 "R&D 혁신·인재 양성·규제 선진화로 바이오산업 혁신"
08:12:00 하나금투 "현대제철, 4분기 내수부진 영업손실 예상...목표가 ↓"
08:13:00 [2보] 작년 취업자 30만1천명 증가...고용률 60.9%, 22년만에 최고
08:13:00 [속보] 홍남기 "사회적 가치, 공공부문 선도적 실천...민간 확산"
08:14:00 [2보] 홍남기 "작년 일자리 반등의 해...양과 질 큰 폭 회복세"
(중략)
09:30:00 사회적 가치에 방점 찍는다...공무원시험·재정사업 평가에 반영

기사를 내보낸 순서와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합뉴스> 데스크는 사회적 가치에 별 관심이 없고 주로 고용률에 관심이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9시30분에 내보낸 사회적 가치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제목과 앞부분만 소개한다.

사회적 가치에 방점 찍는다...공무원시험·재정사업 평가에 반영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확대...사회적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우대

(세종=연합뉴스) 김경운 기자 = 앞으로는 공무원 채용과 승진, 재정사업, 공공조달 등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된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른바 근로자이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민간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사회적가치 우수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이 확정됐

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의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한다.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와 비교해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문제 의식을 갖고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공무원 채용과 승진에서 사회적 가치 및 책임에 비중을 두고 평가하기로 했다.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사례, 정책 등을 질문하고, 정책 성과를 평가할 때도 협업과 팀워크 등을 반영하는 식이다. 공무원 승진 심사에 반영되는 필수 학습요건에 업무 외 봉사나 재난구조 등 사회적 가치 기여 항목을 담는다.

개개인 인사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기금, 연구개발(R&D),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에는 가점을 주도록 의무화한다. 재난안전평가의 사회적가치 성과 가점에 3점을 추가하고 균형발전평가 배점은 20점에서 25점으로 올릴 예정이다.

기금의 존치 타당성 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새로이 반영한다.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에도 반영되도록 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 재정사업의 경우 매년 사회적 약자보호, 기회균등, 공동체 등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100개 내외 선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교육청 금고은행 지정은 물론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전달하는 전형적인 행정 기사다. 그러나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정책 수용자인 국민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지면 제약이 없는 <연합뉴스>의 특성상 기사를 이렇게 쓸 수 있다. 다른 몇몇 언론에서도 인터넷에서 사회적 가치 기사를 썼다.

그러나 종이 신문에서는 사회적 가치 기사를 찾기 어려웠다.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 가운데 <서울경제> <이투데이> <머니투데이> 정도가 지면에 사회적 가치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공기업 평가 '사회적 가치' 확대 재무건전성·실적 등한시 우려

정부 '공공부문 추진전략' 확정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등급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항목을 보강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은 사회적 가치 부문의 배점이 확대된다. 우리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적자 기관들이

실적과 무관하게 우수한 등급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 부문의 지표와 내용을 보완하고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균등한 기회 ▲상생협력 ▲안전 등의 지표와 관련한 내용을 보강한다. 또 지방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경영 강화 등 리더십 배점이 4점에서 14점으로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배점을 기존보다 50% 이상 확대한 바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2020년 01월 16일 08면 (종합)

(23.6*4.9)cm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우리 언론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몇 가지 가설이 있다.

첫째, 기자들이 개념이 없고 무식해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다. 정말 그럴까?

둘째, 광고주가 경제적 가치를 좋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셋째, 행정부의 사회적 가치 정책에 '영혼'이 실려 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사회적 가치 정책을 세우고 집행한다. 그런데도 언론이 진정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행정부나 언론이 사회적 가치를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적 의제'로 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행정부의 '정치적 의제'로 보기 때문 아닐까?

쉽게 말해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김대중 정부의 제2의 건국, 노무현 정부의 혁신, 이명박 정부의 선진 일류국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생각하는 것 아닐까?

2022년 대선 이후에도 사회적 가치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불가능해 보인다.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국회와 행정부와 언론이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적 가치를 대한민국의 중심 의제로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 말 그대로 실현이 중요하다.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 결국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처럼 사회적 가치법을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야당의 정치협상, 또는 여야간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다.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사회적 가치의 당위론만 주장하는 것은 집권 세력과 행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른바 보수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해 '4+1'의 정치개혁 및 검찰개혁 법안 성공 사례가 있다. 집권당 주도로 연립정부 또는 입법연대를 구성해 국회 패스트 트랙에 올려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5분의 3 이상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연립정부나 입법연대를 구성해 사회적 가치 관련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했고 정부입법으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반대가 확실한데도 밀어붙였다.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헌법안과 법안을 만들어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정치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다. 모범적인 법률안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아도 의미가 없다. 한 줄이라도 실제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을 바꿔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회적 가치법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정치적이고 현실적으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끝)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구체적 성과로 답해야

염형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

<토론문>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구체적 성과로 답해야

엄형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1. ‘사회적 가치 실현’이 국정기조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를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의 현실을 점검하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평가하는 포럼의 개최는 시의적절합니다.

2. 장덕진교수님의 발표, ‘한국사회와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실현 - 의미와 전망’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확산해야 하고, 공공성의 요소인 공익성, 공정성, 공민성, 공개성을 제고하는 것이 구체적 방안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우선 필요하다는 제안도 매끄럽습니다.

다만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면 더 좋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논의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기에, 직접적인 평가와 선명한 대안의 제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등의 추진 현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거나, 각 기관들이 실질적 목표를 제시토록 강제하는 실질적 수단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3. 정부는 1.15(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발전목표’를 제시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한 것 자체가 큰 의미고 진전입니다. ‘전담조직, 점검체계 등 추진기반이 미약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주요제도의 실질적 내재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에서 진지함을 느낍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을 앞세우고, ‘조직 구조·문화 개선’,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방향을 내세운 것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설립의 취지 자체가 공익의 증진임을 감안한다면, 공공기관들에게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란 ‘자기 사명에 대한 성찰’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의 마련’이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는 개발 중심의 업무를 보전 중심으로 전환해 시대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

하고, 금융기관들은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전은 개도국에 까지 가서 석탄화력발전소들을 짓고 있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국민연금 등은 함께 어깨 걸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정부의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변화를 당장 보여주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노력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변명은 힘을 잃습니다. 공공부문인 서부발전의 산재 처리 과정이나 도로공사의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기관이 임원진이나 정규직들에 사유화되었다는 보여주었습니다. 공익성, 공정성, 공민성, 공개성 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이들의 독선과 욕심을 몰라라한 정부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이 진정성 있는 정부의 기조인가요?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기존의 사회봉사나 기부와 무엇이 다를까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덧붙여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을 지원한다며, '기업·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가르치겠다'거나 '끼워주겠다'거나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행정이 혁신을 이끌 수 없으며, 특히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더욱 가능치 않은 얘기입니다. 또한 방법이라는 것도 법을 만들고,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들인데, 이런 과정이 불필요한 규정과 절차만 늘이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상부상조하겠다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업무를 제한하고, 한강을 시민들과 가꾸겠다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설립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던 간섭과 규제가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랍니다. 중간 조직의 확대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들에게 도움 되는 정책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시민사회 강화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시민사회 강화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

0 공공성

- 제도 => 재산권 - 의사결정과 잔여 배분
- 참여 : 의사결정참여, 자본참여, 성과배분참여
- 가치와 창출과 배분 : 경제적 이슈(가치)이자 사회적 이슈(가치)
(줄고 '사회가치경영', 2018의 서문과 1장.의미와 방향 참조)

0 국가, 시장, 그리고 사회의 역동성 : 전통공동체, 위계, 시장, 공생체

- 대런 애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좁은 회랑 - 정부 억압과 사회 불법 사이
폭정이나 무정부상태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의 힘이 필요!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가 공존하여야 국가와 사회가 경쟁하면서 함께
강화되는 레드퀸 경쟁 필요
- 포용적 제도
투자과 혁신을 위한 경제적 유인 제공, 광범위한 경제적 기회, 공정한 법 집행과 갈등
해결(정의), 정부 공공서비스와 핵심인프라 제공

0 사회적 경제는 누룩

정부, 사회조직 : 비영리(advocacy social welfare, charity, 국제구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영리기업 CSR, CSV : 시장

0 공공부분

- 조직, 인사, 평가, 재정
- 지난 2019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 대폭 확산. 이
들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육성,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
치를 측정하는 적극성을 보임.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정운영을 천명하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50%가량을 사회적 가치 관련으로 구성하는 등 변화를 촉발시켰다. 본연의 공공
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사회적 편익이 증시될 수 있는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 평가에 있어서 기존 지표들을 사회적 가치라는 항목으로 모아 재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
- 공공기관은 원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것이기에 사회적 가치와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그동안 효율성 제고에만 주력해온 현장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 여전히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그저 새로운 경영평가 항목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있으며, 조직 전반적인 혁신이 아니라 기획 단위 등 담당 팀의 과제로 인식하는 문제도 있음.
- 공공기관들은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 미션이 있기에 본업과 관련지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사회적 미션을 잘 정의할 필요. 이러한 기반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명의 재인식, 이해관계자집단간의 관계 재정립, 구성원들의 인식과 역할의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적가치 창출 우수 공공기관' 대상을 수상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 안전한 주거·근로환경 조성 등 본업에 충실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체감을 높였다. 사회적 가치 비전과 전략과제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경영 및 사업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기관 고유의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

0 시민사회 강화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 :

- 민간의 자립,자조에 기반하여 사회적 경제가 이루어진다(지역현장 기반)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한다.
-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만 사회적 경제(또는 시민사회)가 성장한다는 사고방식을 낡은 것이므로 버려야 한다. 특히 양적 증대가 곧 발전이라고 생각하여 이 단기적 지표에 집착해선 안된다.
- 정부는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하여 금융이나 정부조달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차별받거나 진입에 장벽이 되는 요소들을 개선하는 일에 주력한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의 경우, 오히려 공제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기왕에 차별받아왔던 영역을 자유롭게 하여 민간의 활력을 높여줄 필요.
- 사회적 경제조직은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으로 발전해야
- 사회적기업이라고 무조건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에 따라 고객의 선택을 받아 매출을 올리고, 정부역할을 대신함에 따른 grant를 받는 것
- 부처소관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및 지원 확대
- 새마을금고, 신협 등 조합형 사회적금융기관 역할 강화, 협동조합 우선출자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
- 협동조합간 연대 통한 성장위한 이종연합회 설립 허용등 스케일업 지원

부록1

2019 LH 사회적 가치 추진성과

2019 LH 사회적 가치 추진성과



경영관리 부문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
함께 만드는 LH



숫자로 보는 2019년 LH 사회적 가치

일자리 창출



10,103명
2년 연속 일자리 창출 유공기관
(2018~2019년)

60세 이상
어르신 채용



1,793명
(10년 누적 총 2만명)

사회적 가치 창출
첫 대통령 표창 기관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재난 안전예산

2,116억원



(전년대비 94% 증액)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663개
(사회적 기업 연계 입주청소서비스 등)

신입사원 채용



829명
(LH 창사 이래 최대규모)

여성 관리자



316명
(전체 9.7%)

LH 희망상가 공급

232호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LH 희망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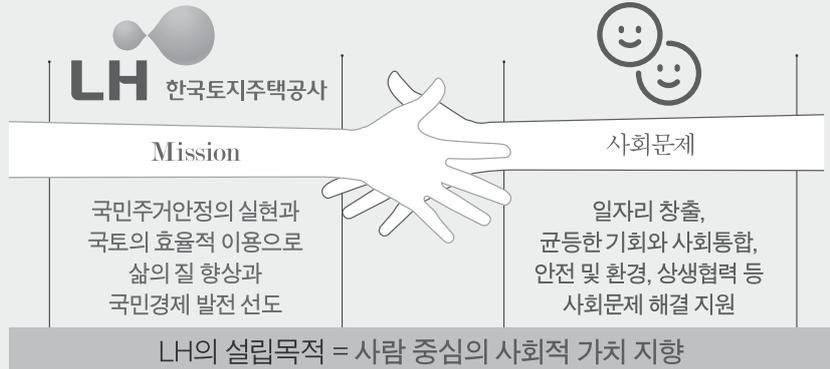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417개규정
(사회적 가치 중심 내부규정 정비)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

01 LH와 사회적 가치



02 LH와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

설립목적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 선도

비전

튼튼한 국민생활 파트너 LH

경영목표 (*19~*23년)

정책	공공주택 13.9만 호 공급	도시재생뉴딜 참여 40곳
미래	수요맞춤형 후보지 56km ² 확보	스마트시티 76km ² 조성
사회적 가치	일자리 130만 명 창출	동반성장 우수기관 달성
경영	고객만족도, 청렴도 최고등급	이자부담부채 비율 132%

사회적 가치 비전

사람과 세상을 이어가는 행복터전 with LH

사회적 가치 13개 요소



CEO 경영방침



2019년 추진목표

사회적 가치 내재화 및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2019년 추진과제

혁신 ·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① 사회적 가치 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역량 강화 ② 지속가능한 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③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함께 나누는 희망 with LH
실행 · 주거복지 도시 지역발전	① 인권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정적 주거 생활권 보장 ②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 및 경제적 자립 지원 ③ 환경보전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성 제고 ④ 지역경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역량 강화
신뢰 · 안전강화 투명경영	① 안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및 주거환경 조성 ② 사회적 책임 자발적·적극적 책임 이행으로 공정한 LH 구현 ③ 공공성 사회문제 해결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한 공공성 강화
포용 · 동반성장 생애복지	① 상생협력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성장사다리 제공 ② 보건복지 건강한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 조성 지원 ③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공간·문화 조성
소통 · 거버넌스, 노사상생	① 의사결정 경영·사업 전반에 시민 참여 및 소통 확대 ② 노동권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차별 없는 일터환경 조성

좋은 일자리 함께 나누는 희망 with LH

1. LH형 일자리 종합계획 “LH Good Job Plan 시즌3” 수립·이행



국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
(LH 국민공감위원회)



신종년 창업지원 Jump Up 5060
(’19년 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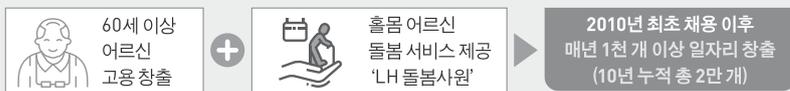
2.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LH 일자리 플랫폼 마련

▶ LH 핵심사업과 연계한 국민체감형 일자리 창출에 전사적 역량 집중(’19. 4월)



구분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소계	10,103명
	직접고용	4,563명
	간접고용	5,540명
창업공간		405개
사회적경제조직		663개
창업지원		387팀
인재육성		1,830명
총 10,103명 신규 고용 창출(’19년)		

3. “사회문제 및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혁신창업공간 제공 등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개소,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착공(’19. 12월)



LH 무지개 돌봄사원 채용
(’19년 1,793명)

4. “공공부문 最高·最大의 일자리 창출기관”으로서 역량과 성과 인정

- ▶ 2년 연속 일자리 창출 유공기관 선정(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19. 1월)
- ▶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표창 수상(산업통상자원부, ’19. 11월)
-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대회 대상 수상(고용노동부, ’19. 11월)
- ▶ 제1회 LH 사회적 가치 Award 개최(공공·민간부문 성과 확산, ’19. 12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블라인드 채용 면접 전형(동일 복장 지급)

1. “채용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LH형 채용 제도 개선

▶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 강화, 채용단계별 검증·환류시스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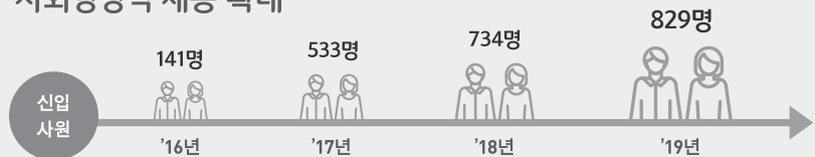
▶ 인공지능(AI) 면접 방식 시범도입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제도 마련('19. 9월)

면접장소·시간 상이에 따른 차별적 요소 해소, 면접위원별 개인 선호 차단 효과



창사 이래 최대규모 신입사원 채용 ('19년 829명)

2. 공사 출범 이래 “최대 규모 신입사원 채용” 및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구분	청년	고졸	이전지역	비수도권
채용목표	219명	62명	92명	233명
채용실적	646명	65명	96명	327명



여성 관리자 아카데미 과정(WILL)

3. 여성 친화 근무환경 조성 and 여성 관리자 확대로 “차별 없는 일터환경 조성”

▶ 주거급여조사 등 특화형 직무 발굴, 단축근무제도 확대, 가족돌봄휴가(10일) 신설 등
▶ 연차별 여성 관리자 확대계획에 따라 성과와 능력 중심의 여성 관리자 선발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비율	5.7%	6.5%	8.3%	9.7%	11.3%	13.2%
여성관리자	163명	195명	262명	316명	370명	430명

▶ 직급별 여성관리자 특화교육 확대 시행으로 여성 리더십 육성 ('18년 31명→'19년 55명)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임원 임명 확대 ('18년 상임이사 1명, '19년 비상임이사 1명)

4. “승진·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한 하위직 처우개선 등 불합리한 차별 해소

▶ **6급사원**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승진제도 일원화, 다면형 역량평정제도 도입

▶ **업무직** 1·2차 단계별 심사방식 및 근무평정제도 도입을 통한 조직 몰입도 향상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공정성 확보
상위직 직무수행 역량 강화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국민의 소중한 삶터와 일터를 더욱 안전하게

1. 재난안전 분야 조직·예산·인력 고도화를 통한 “안전 최우선 경영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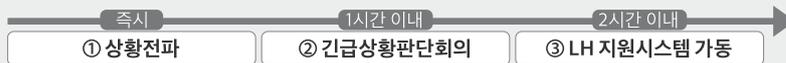
- ▶ **조직** CEO 직속 ‘안전기획실’ 및 지역본부장 직속 ‘안전관리센터’ 신설('19. 7월)
- ▶ **예산·인력** 선제적 투자 확대를 통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CEO 건설현장 안전점검

2. 과학적 재난관리 및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난관리시스템” 도입

- ▶ 지진, 화재, 태풍 등 복잡 다변화하는 재난 상황에 선제적·효과적 대응을 위한 종합 로드맵 마련('19. 12월)
- ▶ 60년 만의 최대 태풍 영향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활용으로 LH 건설현장 및 임대주택 인명피해 Zero 달성
- ▶ 임대주택 시설안전 고도화 : 드라이비트 3만 호 교체, CCTV 1.4만 개소 개선, 필로티 주택 105개 동 내진보강 완료
- ▶ 속초·강릉 화재 시 시간대별로 LH 재난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하여 이재민 긴급주거지원 조치 시행



재난관리지도 제작

- 재난영향 시설을 GIS기반 지도화
- 취약지구 파악 및 사전대비 강화
- 기상청 재난정보 실시간 연계

↓

재난관리 지도시스템

- 태풍이동경로 변경표출
- 태풍경로상 소관시설물

+

국가재난정보 DB 오버랩

- 사업지구 인근 침수이력 등 실시간 파악

3.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 임직원 보안교육 시행(필수교육 반영), 내부성과평가 신설, 보안관계 전문성 향상(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 ▶ 스마트홈 확산에 따른 해킹 등 보안취약점 발굴·사전조치로 공공주택 입주민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4. 지속 가능한 국토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환경경영” 및 “기후변화 대응”

- ▶ 3기 신도시 등 기획부터 운영까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대책 수립
- ▶ 미세먼지 감지센서, 스마트 클린 버스쉘터 설치 등 ‘LH 미세먼지 관리 종합관리대책’ 수립
-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확대 적용 (서울수서, 대전도안 등)



스마트 클린 버스쉘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19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스마트 리사이클링 장치, '19. 11월)
환경부장관상 제19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하동공원 다랭이밭 소생물 서식지 복원사업, '19. 11월)

지역에는 활력을 기업에는 희망을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기존 건물 리모델링)

1. 쇠퇴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개소

▶ 조선업 실직자·지역주민을 위한 창업지원공간 및 지역맞춤형 교육과정 개설('19. 12월)

창업지원공간 조성(18개 창업 LAB)	지역맞춤형 교육과정 개설(12School 프로젝트)
경제활력 및 고용기반 확충 : 총 18개 업체, 40명 고용창출 900명 교육 참여	

2.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및 혁신 플랫폼 구축

▶ LH와 경남도 및 관내 18개 시·군이 참여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 공동 추진('19. 4월, 6개 사업)

항녕군 (주)영산고 부지 행복주택 사업	거제시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빈집매입	김해시 중독자 재활센터 운영 지원	거창군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지원	고성군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홍보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실살람터'
---------------------------------	-------------------------------	------------------------------	------------------------------	-------------------------------	---------------------------------

▶ 경남 사회혁신플랫폼 주도적 참여(CEO 공동의장)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상생 생태계 마련('19. 6월)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플랫폼 주도적 참여 및 사회적 가치 구현 확대 유공('19. 11월)	
--	--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19.7월)

3. 적정 공사대가 산정 등 “공정경제 모범거래 모델”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

▶ VIP 주재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 우수사례 발표('19. 7월), 공공기관 확산 협약체결('19. 11월)

원가산정 개선 · 지재·노무단가 개선 · 제경비 등 상향	적정 공사기간 확보 · 착공전후기간 확대 · 안전기후변화 반영	불합리한 제도 개선 · 공동도급제도 개선 · 직접구매제도 개선	근로자 복지 향상 · 소통플랫폼 구축 · 전자카드제 실시
--	---	---	--

4.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 확대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제도 신설**

LH의 아이디어 + 중소기업의 생산력 = 특화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한 번에 해결

▶ **통합기술마켓 플랫폼** 중소기업이 신기술자재를 제안 → 공공기관의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구매판로지원 역할 수행

▶ **해외시장 동반진출** 쿠웨이트, 인도 스마트시티, 러시아, 미얀마 산업단지 등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5.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포용적 동행”을 위한 성장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

▶ 입주민과 사회적 기업이 함께하는 LH 임대주택 입주청소사업 확대 ('18년 24개 단지, 12개 기업 → '19년 126개 단지, 36개 기업)

▶ 토지임대부, 공공지원형, 매입임대형 임대주택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서민주택 공급 동반자로 육성(수원조원 등 8개 지구)

▶ 아파트형 사회적 협동조합(4개소), 소셜벤처(53팀), 제주 내 식당 프로젝트(11팀)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

1. 준법·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예방적 윤리환경 조성”

“LH의 존재 의미는 공공성, 공정성에서 시작되고, 윤리·공정·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기반이 무너져 버림...” CEO 경영방침



의결기구	윤리경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전담조직	신설	신설		
	인권·윤리경영 윤리경영추진단	성희롱·갑질·괴롭힘 LH 인권센터	내부건제 감사실	외부건제 청렴옴부즈만
규범체계	LH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지속가능경영규정, 부조리 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 등 14건			
평가환류	내부	윤리경영지수, 옴부즈만 모니터링	외부	권익위 청렴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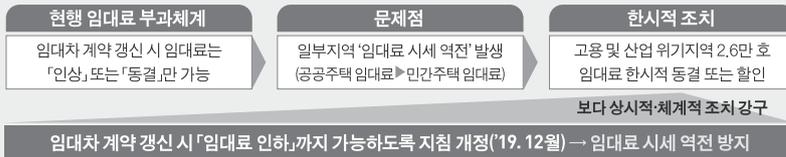
- ▶ 사회적 가치 실현 감사, 실시간 감사시스템 고도화, 취약분야 통제 강화 등 촘촘한 감사활동으로 예방적·자율적 통제 문화 정착

대통령 표창 안전분야 부패 근절 유공(행정안전부, '20. 1월)
3년 연속 1등급 '19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국민권익위)



2. 내 공공임대사업 최초로 “임대료 시세 역전 방지 방안”을 신설하여 윤리적 가치 실현

- ▶ 규정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인 제도 개선으로 서민 주거권의 적극적 보장과 공정계약 모델 마련



3. “기술심사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정한 내 구현

- ▶ 공공기관 최초 건축분야 모든 공사·용역 업체선정 심사과정 인터넷 생중계
- ▶ 위원 및 업체 간 토론심사 확대와 심사위원 책임 강화
- ▶ 전문성 강화 및 심사위원 사후평가 등 5개 위원관리 강화제도 도입
- ▶ LH형 용역중심제 제척·기피·회피 요건 및 절차 명확화로 실효성 있는 심사비리 예방
기술평가 1위 업체 낙찰, 중소기업 참여, 안전 평가항목 반영



4.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제도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생활권 적극 보호”

- ▶ 인권전담기구(LH 인권센터, LH 인권자문단)를 신설하여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
- ▶ 체계적 인권경영 구현을 위해 공사 최초 ‘인권영향평가’ 도입 ('19년도 19개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권고)
- ▶ 임대주택 공동체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서민 주거권 보호 강화 (경찰서 등 유관기관 연계, 입주민 정신상담 및 치료지원 등)

부록2

신용보증기금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신용보증기금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① 業을 통한 사회적경제보증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보증공급 확대

-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사회적경제 전담팀’ 조직, 전용 보증상품* 운용 → 든든한 성장파트너 역할 수행

* ①사회적기업 나눔보증, ②협동조합 희망보증, ③마을기업 두레보증, ④자활기업 초록보증, ⑤소셜스타트업보증

[표] 사회적경제기업 보증공급 현황: '22년까지 총 5천억원의 보증지원 예정

구 분	'17년		'18년		'19년	
보증공급	158억원	181개社	1,077억원	680개社	1,609억원	760개社

□ 지역자산화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도입

- 신용보증기금 - 행정안전부 - 농협은행 「지역자산화* 지원 MOU」 체결('19.10월)

* 지역 내 舊도심 유휴공간을 공동 소유·운영하여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19년 시범사업으로 4억원 보증지원*, '20년부터 3년간 375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자산화 보증지원'(임팩트 프로젝트 보증) 추진

* 충남 서천군: 3억원(공실 건물 리모델링), 경남 거제시: 1억원(민박시설 리모델링)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에 활용할 '표준사회적성과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사용기관이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내부 보증심사용 업무전산과 외부 유관기관용 웹 플랫폼으로 통합 구축

- 유관기관*과 평가시스템 개발 및 사회적금융 확산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20. 4월부터 외부 플랫폼 활용 가능 → 사회적경제·금융 활성화 기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적가치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협(2곳) 등 6개 기관

② 주 고객인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 실현 유도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인정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19.8월)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로, 공공기관·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사회적책임(CSR) 경영을 적극 유도

[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우대책

구 분	내 용
보증·보험	보증심사시 평가 우대(보증료 0.1%↓) 및 매출채권보험료 할인
컨설팅·연수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및 기업연수 기회 우선 제공

□ ‘안전’·‘환경’ 분야를 보증심사에 반영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舊 OHSAS 18001) 인증기업을 우대 부문 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

*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조직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효율적·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시스템

- 기업의 미래성장성평가 시 ‘기업 윤리적 문제’* 평가항목 신설

* 최근 3년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고발조치 여부 등을 확인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및 공정무역 실천 선언

- 각종 예산집행 시 구매처의 사회적경제기업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 가능 시스템* 도입 →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실적 전년대비 59% ↑

* 본점 및 전국 150여개 영업조직에 적용

- 국내 기업·기관 최초로 ‘공정무역’* 실천기업 인증을 취득하고 공정무역 페스티벌 지원, 홍보부스 설치 및 특판전 실시

*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무역·교역하는 윤리적 소비 캠페인

③ 기관 보유 시설·공간을 활용한 사회적가치 실현

□ (지역상생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직원 기숙사 ‘청림재’ 지붕 공간 제공

- 본점 인근 안심마을 에너지협동조합과 ‘청림재’ 지붕임대계약 체결(‘19. 9월), ‘20년 상반기 중 발전소 완공(연간 21백만원 전력생산)

* 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본 사례 전파



□ (개방형 북카페 설치) 본점 1층 유희공간에 ‘휴&Books’ 설치

- 지역의 공공도서관 부족한 현안에 관심을 갖고 고급 스터디카페 분위기의 개방형 도서관을 완공하여 지역주민에 개방(‘18.11월)

* 하루 평균 70여명 방문, 독서와 학습의 장으로 애용(평일 ~20시, 주말 ~1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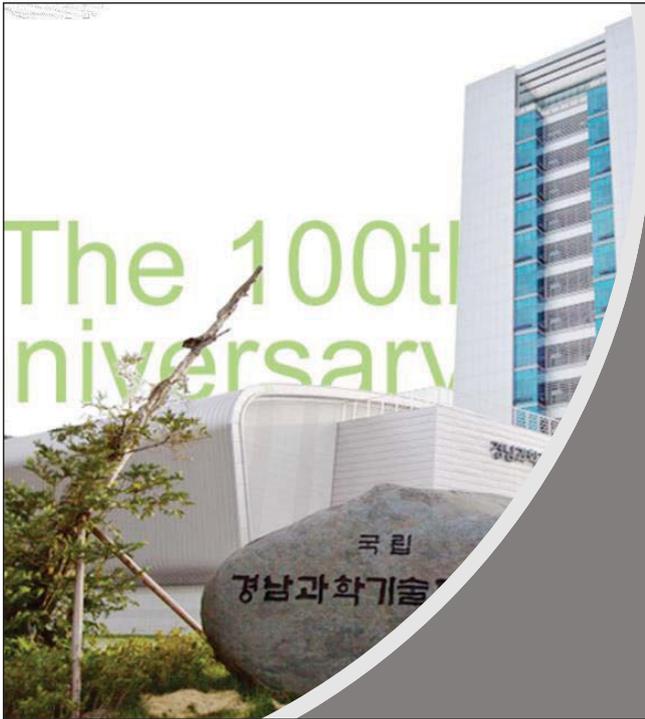
□ (체육관 시설 개방) 지역아동 명랑운동회 개최 및 지역주민 여가 활동 지원

- 대구 동구소재 지역아동센터 학생 200여명을 초청하여 운동회를 실시 하고,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 등의 체육활동을 지원



부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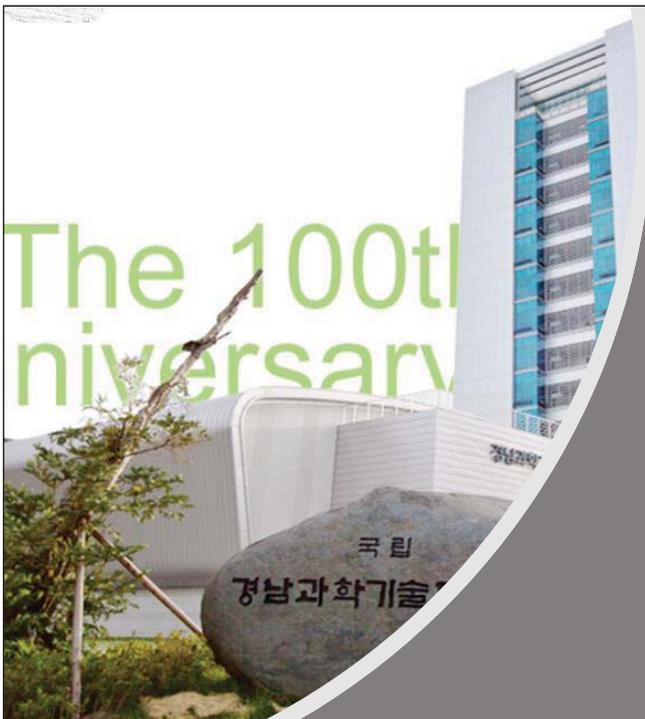
공유자산으로서 대학, 대학사회책임



공유자산으로서 대학,
대학사회책임
(University as a Commons and the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2020. 2. 19(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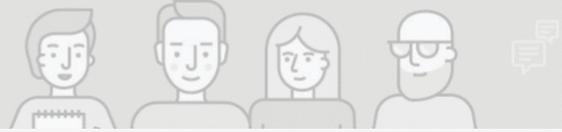
송원근(Song, Wonkeun)



차 례(Contents)

- 01 새로운 인식: 3개의 공유자산
- 02 대학사회책임(USR)
- 03 경남과기대 청년모델
- 04 지역 유휴자산 활용
- 05 대학사회책임센터

01 새로운 인식: 3개의 공유자산



□ Commons : Properties and Goods which are jointly developed and maintained by a community and shared according to community-defined rules.

* 공유지는 단순한 토지나 건물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공동의 전략(견제와 균형)을 포함하는 것(노벨상 수상자 E. 오스트롬), 그래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사회적관계 집합(set), 즉 이 규칙에 의해서 그룹 성원들이 책임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



01 새로운 인식: 3개의 공유자산



공유자산 유형	내용	구체화	
국립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의미에서 대학은 지식, 특히 디지털 공유지식의 생산자이자 저장소 ■ 사회적책무 수행,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실현의 수행기관, ■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공유하면서, 대학에 요구되는 교육프로그램, 역할 수행 (사회적경제 교육, 지역사회혁신 교육, 팀(Teanpreneur) 창업, 소셜벤처 교육 등) 	대학사회책임센터 사회적경제 교육인프라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재생산을 위해 보존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 ■ 지방소멸 등 위기 상황에서 지역(방)을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이자 동료 생산의 주체 ■ 지역의 공유자산(물리적 공간, 사회적관계 집합)을 공동으로 유지, 강화, 새로운 공유자산을 만들어 갈 책임 	전(全) 주기 청년모델 (지역! 청년을 닦다)	
유희 자산	디지털 커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이 취업(공공기관 포함)을 위해 준비하고 디지털 공유자산을 이용하여 제조업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물리적 공간(터전) ■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면서, 공동으로 운영되는 사회주택의 공간 	구 법원 부지
	광장, 농업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들이 지역과 소통하는 광장으로서 공간 ■ 지역산업(농업)에 기반한 터전을 마련해주는 경제적 삶의 터전 	폐 진주 역사 부지

공유자산_대학

- 산학협력에 대한 과도한 강조
- 개인의 분발에 기초한 취업교육
- 공모방식의 교육재정 투자
(성과주의, 과도한 경쟁, 비효율)
- 스킬 위주 창업교육
- 사회공헌, 봉사



- 창조, 융복합, 인문사회과학
- 직무+사회혁신+소셜벤처
- 균형발전, 지역전문가 양성
- 창업+지역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마인드와 자세 교육
- 지역사회 책임, 사회적가치

공유자산_청년

- 끝없는 경쟁, 스펙 쌓기, 개인화
- 일자리 중심
- 글로벌 인재
- 창업(개인 창업자)



- 협력과 공동체 의식, 시민
- 일거리 중심
- Glocal인재
- 사회적가치 기반 팀창업, 동료생산

공유자산_청년

- 청년은 그 자체로서 우리 사회의 공유자산(Commons)이라는 인식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재생산을 위해 보존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
- 지방소멸 등 위기 상황에서 지역(방)을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이자 동료생산(peer to peer Production)의 주체
- 지역의 공유자산(물리적 공간, 사회관계 집합)을 공동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며 새로운 공유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책임을 가짐

Commons	Goods which are jointly developed and maintained by a community and shared according to community-defined rules.
Peer production	People cooperate voluntarily on an equal footing (as peers) in order to reach a common goal.
Commons-based peer production	Peer production which is based upon commons and which creates new commons or maintains and fosters the existing ones.

<http://keimform.de/2010/self-organized-plenty>

공유자산_지역 유희자산

- 시장주의 기반 활용(지자체 경쟁)
- 지역 부(wealth)의 유출의 수단
- 재생보다는 개발, 개발이익
- 하향식 의사결정



- 지역자산화(지역의 부 형성)
- 재생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 시민 혹은 주민 주도형
- 공동생산(co-production)

02 대학사회책임(USR)_정의와 필요성

1. 정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등 대학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대학의 의사결정이나 대학경영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가치, 나아가 지역 및 사회에 대해 대학에 부과되는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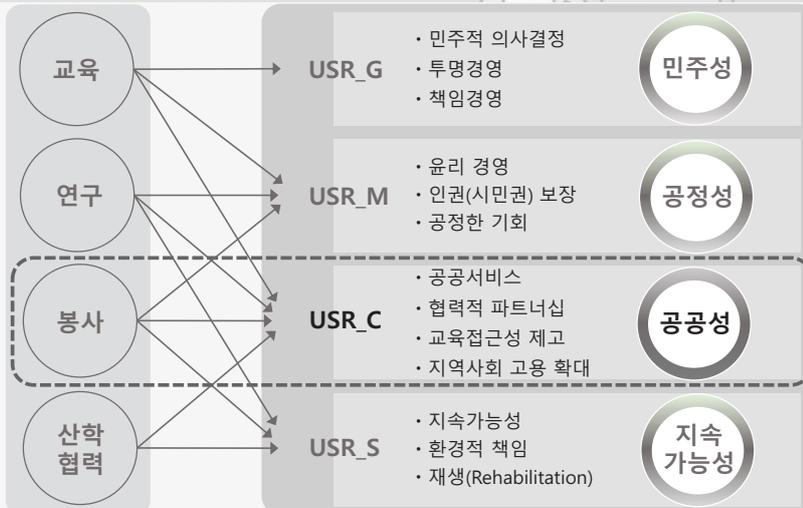
2. 필요성

- 국립대학 사회책임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시, 관련 활동을 체계화, USR에 대한 학내·외 인식을 제고, 실천을 유도
- 기존 사회봉사활동 수준을 넘어 대학사회책임으로 심화·발전시켜 USR자원을 통합관리, 국립대학 고유모델 수립
- 지역 내 각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책임활동을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 협력적으로 전개
-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 ‘지역 공동의 자산(Commons)’으로 인식, 청년 대학생 일자리 확보, 체인지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모델의 수립 필요
- 대학 중심으로 지역의 USR자원을 통합,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좋은 지역사회(good community) 형성에 기여

02 대학사회책임(USR)_유형

대학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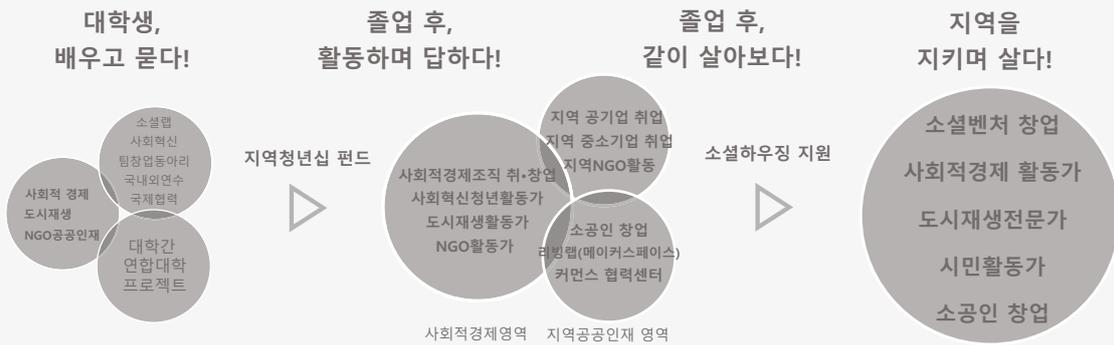
대학사회책임(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USR_C :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

03 청년모델: 경남과기대

- 지역! 청년을 닮다 :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지역을 지키며 살려는 청년들의 활동과 삶을 위한 지역청년 프로젝트
- 4년 +2년(GAP YEAR)



04 지역유류자산 활용: 구 법원 부지(디지털 공유자원 청년센터)

01 추진 배경

- 구법원 부지 국유재산 1,400㎡ 사용승인 통보('16.12.13, 기재부)
- 사용승인 받은 국유재산 1,400㎡를 등기 후 “청년일자리 대책(2018.3.15.)” 및 “지역 유류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GNTECH 취창업센터 (서부경남 디지털 공유자원 청년센터)로 활용코자 함.
- 청년일자리 대책(2018.3.15.)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유류공간(국유재산·주민센터 등)을 조사하여 특성별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고, 청년창업자에게 저가 공급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2018.5,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창업방안,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일자리위원회(2018.3.15.)
- 서울시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2018.7)”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표방하는 3대전략. 9대 과제 중 “지역 유류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

04 지역유휴자산 활용: 구 법원 부지(디지털 공유자원 청년센터)

02 성격

- 구 법원 부지는 단순히 유휴 국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자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함
- 디지털 공유자산(Digital Commons)을 활용한 청년들의 peer to peer production, 협력적 커먼스 생산 공간
-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공유자원을 공동으로 관리, 유지, 강화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

* Rifkin(2014) uses the term "collaborative commons" to denote networked commons like open-source software and hardware, and argues that these commons democratise access not only to information, but also to material resources.

03 서부경남 디지털 공유자원 청년센터

-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peer to peer생산) 등을 통해 대학생(대졸) 청년들의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유휴자산을 경제적 자산화하여,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지역에 남아 지역(지역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 직무학습 공간
- 지역 청년들이 지역공동체 복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한 사회혁신의 구심체이자 관련 조직들의 소통 공간
- 혁신도시 시군2, 서부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등 실행 거점 공간
-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소셜하우징 제공, 청년수당 지급 등), 사회혁신 활동 의무화, 공유자산 공동 관리 책임 부과

04 지역유휴자산 활용: 구 법원 부지(디지털 공유자원 청년센터)

04 대상 국유재산 현황

-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4-5번지 등 6필지 9,852.1㎡와 건물, 공작물, 임목죽 등

* 부지 내 진주시 공유재산 1,986㎡ 제외(진주시로부터 2018년도 시용승인 완료)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유	비고
1	295-4	대	6,397.2	기획재정부	일부인 1,400㎡ 사용승인
2	332-3	대	604	진주시	
3	332-5	도로	1,081	진주시	무상사용 승인
4	332-6	도로	301	진주시	

[참고] 영국 지역주의법(Localism Act, 2011, 2012 개정)의 부여권한

- 지역공동체의 근린계획권(Neighbourhood Planning), 지역공동체 자산개발권 (Community Right to Build), 자치단체의 과도한 지방세 인상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승인 혹은 거부권(Community Right to Approve or Veto Excessive Council Tax Rises), 지역공동체의 주거자산 관리권한(Community Right to Manage) 및 지역공동체 캐쉬백(Community Cashback) 프로그램 등
-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자산(Assets of Community Value)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 공공서비스의 공급·운영에 대한 지역공동체 우선참여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 유휴 공공부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용신청권(Community Right to Reclaim Land) 등

04 지역유휴자산 활용: 구 법원 부지(디지털 공유자원 청년센터)

05 경과

- 국유재산 1,400㎡ 사용승인 통보(기재부): '16.12.13
- 진주시 공유재산 1,986㎡ 무상대부 통보(5년간): '18.3.14
- 창업지원주택 관련 LH와 협의: '18.3~
-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경남과기대, LH 등 관계기관협의(공문): '18.8.2~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간담회 요청: '19.2
- 구법원부지 내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78억 요청(교육부): '19.3.29
- 서부경남 디지털 공유자원센터 TF(총 12명) 구성, 임무수행 및 역할 분담
- 기재부 및 교육부 부지 일부(2,091㎡, 검찰청사) 사용승인: '19.9.27
- 검찰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33억원): '19.12
- 등기 완료(약 6,000㎡): '19.12
- 리모델링 사업 자문위(사무국),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 구성('20.1)
- 검찰청사 리모델링 컨텐츠 보완 전문가 회의('20.2.10)
- 검찰청사 부속건물(사동) 리모델링('20.2월 말 완료 예정

06 부지 활용 계획

- 디지털 공유자원 청년센터: ICT융합 기술, 공유지식 활용, 경남과기대 등 지역 청년 대학생과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혁신 조직들의 활동 및 테스트 베드 공간 (A 구역)
- 대학에서 제출한 검찰청사 활용 공간배치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와 연구마을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어 청년들의 취창업공간, 디지털 공유자원센터로서 기능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됨
 - 1층: 중소기업협력센터, 2층: 다목적 강의실과 컴퓨터실, 3-4층: 연구마을
- 창업동아리 등 청년들의 창업관련 활동,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복합 공간, 소통공간 등으로 활용(서울혁신파크 사례)(C구역)
- 이후 사용 승인을 확대(구 법원 부지) 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B 구역)
 - 현재 방송대학교 경남학습관 이전 문제 논의 중
- LH와 협약에 따라 청년 사회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D구역)

04 지역유휴자산 활용: 구 법원 부지(디지털 공유자원 청년센터)



05 대학사회책임 센터(USR Center): 기능



USR센터: 경남과기대 사회적가치 포럼(2019년 12월 현재)

구분	포럼주제	장소	일자
제1회	경남과기대 대학사회책임(USR)센터 역할 대학과 사회적가치 창출: 경남과기대 사회적경제교육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회적 가치 창출: 현재와 미래 사회책임에서 가치 창출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례	경남과기대 본관 2층 대강당	18.3.20(화)
제2회	사회주거와 임팩트투자(CK사업단 주관 청년주거운동)	경남과기대100주년기념관 1층 아트홀	18.5.23(수)
제3회	Connect 서부경남 at GNTECH(창업유관기관 협의회)	경남과기대 본관9층 대회의실	18.10.22(월)
제4회	사회적경제인재양성 계획 문제점, 지역! 청년을 닦다	경남대산학협력관 5층 산학협력세미나실	18.11.6(화)
제5회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인제대학교 본관 6층 회의실	19.1.24(목)
제6회	진주사회혁신의 이제 시범 발표회	경남과기대100주년기념관 14층	19.5.28(화)
제7회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제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경남 사회혁신 대학네트워크 공동	19.10.14(월)
제8회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모색	경남지식연대,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공동	19.12.6(금)-7(토)

USR센터: 대학사회책임지수(USR Index)



USR센터: 사회연대경제(Social Solidarity Economy) 교육

1. 사회적경제 연계과정(학부)

- 2014년 지방대학특성화지원사업(CK)
- 경제학과, 회계정보학과, 영어학과 공동 컨소시엄(6개 학과 참여)
- 국내 최초 학부교육과정에서 사회적경제연계전공 신설(사회연대경제 학사학위)
- 연계과정 미 신청 일반학생들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집중탐구' 운영(비교과)
- 2019. 2 CK사업 종료, 대학 자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연계과정 운영
- 총 24개 정규 교과목 개설, 2019년 연인원 100여명 수강
- 동아리 및 Social Lab 팀 활동: 총 13개 111명 활동

2. 2015년도 사회적기업리더과정(고용노동부 지원, 단기 MBA과정)

- 설치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사회적기업 리더과정 (비학위 1년 과정)
- 모집 : 총30명(사회적기업가(10명), 중간지원조직(지자체 공무원 포함 10명), 대학생(10명))
- 운영기간 : 2015년 9월~2016년 6월
- 교육과정 : 사회적기업 관련 강좌(4강좌) 및 국내외 인턴십

사회혁신 Project Relay로서 'Social Lab' 프로젝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당사자의 문제를 더 깊고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솔루션을 도출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대학생들의 프로젝트 릴레이 • Social Innovation Project Relay: 완결형 프로젝트의 문제(재확중 해결불가), 프로젝트가 지속되면서 개선되지 못하는 한계 극복 위한 대안 • 기존의 동아리 개념을 Social Lab으로 변경하여,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닌, 우리의 문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도록 함 •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팀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 활동비 지원 / 멘토 배정을 통한 활동내용 멘토링 • 활동내용에 따라 사업단 해외연수 시 우선선발 고려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의 접근법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인턴십과 연수 교과를 통해 이루어졌던 현장과 실무 연계방식을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음

USR센터: 사회적경제 교육

3.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1) 2018년도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양성 과정

- 모집: 총 44 명 중 41명 수료
- 사업기간: 2018년 5월 7일~2018년 12월 31일
- 사업비(단위:백만원): 163.2 (지원금 150, 자부담 13.2)
- 교육시간 : 총 31주, 76회, 290시간, 총 5회 비교과프로그램, 사회적경제 현장 인턴십 및 프랙티컴 진행(17명 수료)
- 2019년도 (제 2기 43명) 교육 진행, 수료증 발급

구분	1강좌(8주)	2강좌(23주)	3강좌	4강좌
사회적경제 컨설턴트과정	사회적경제 입문/인문학	사회적경제 Skill-Up I (공통)	사회적경제 Skill-Up II(사회)(33주)	
지역혁신 전문가과정	사회적경제역사/철학	경영관련스킬(재무/마케팅)	사회혁신 이론과 실제	Practicum/MTA (18주)
주요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제마인드 • 협동의 경제학 • 독서프로젝트 • SE리더들과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관련(조직인사/생산관리) • 사회적기업 세무/회계 • 사회적기업 경영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와 지역혁신(15주) • 사회적기업 인턴십 • MTA연계집중교육,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견학/연수 • 문제발굴을 위한 교육방법론 개발 워크숍

2) 2019년도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양성 과정

- 모집 : 총 44명
- 사업기간: 2019년 5월 23일~2019년 12월 14일
- 총 54주, 58회, 195시간, 3회 워크숍, 현장탐방 및 경영분석 실습 1회
- 심화과정 운영: 2018년도 1기 과정 수료생, 2019년도 교육생 공동 참여 총 27명: 1기 12명, 2기 15명
- 교육기간: 2019년 11월 2일 ~ 11월 26일(토) (총 5회, 24시간)

항목	교육 대상 및 성과 지표	목표	달성치	달성률
교육생 모집(유치)	대학(원)생, 사회적경제 기업 임직원, 지역 공공기업, 사회적경제 업무담당자 등 관련 분야 교육생	연 최소 40명	41명 모집	102.5%
교육과정 수료율	수료생 / 피교육생 총인원	80% 이상(32명)	36명	112.5%
심화과정 수료율	1기 및 2기 교육생	-	26명	-
취업 및 창업	수료생 / 관련분야 취업 및 창업	10% 이상(4명)	4명	100%
포럼 등 교육생 조직화	경남 사회적경제 포럼 결성	1개	1개	10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교육생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및 지정	2개	4개	200%

USR센터: USR교과 인증제

4. USR 교과인증제(예정)

- 교양교과, 전공교과, 그리고 관련 교과와 연동된 비교과 활동(실습)으로 구성
- USR인증교과제는 교육단위 및 대학 '교육혁신'을 통해서 제도화
- 지역연계교과목(2019년 2학기 13개 교과목 운영)
- 소셜랩 프로젝트(2019년 6개 운영)
- 커뮤니티 인턴십(지역기업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기관 등에도 인턴십)
- 대학-마을 공동체 협력사업(4개 프로젝트): 경남사회혁신추진단, 5대 지역대학 공동)
- 사회가치 혁신 학교(예정)

5. 지역연계 교과목(지역교) 운영

- 정규 일반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산업, 기업)에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교과목
- 청년이 지역의 공유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 지역에서 취업해서 살아가려는 태도가 중요
- 2019년 사업명: 총 13개 교과 (296명 수강)
- 2020년 1학기 20개 교과



USR센터: USR교과 인증제_지연교 주제들

학과	교과목명	주제
유통학과	소매경영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교양학부(학군단)	안전문화	철암동안전보장및범죄예방
토목공학과	지반방재공학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지역의 위험비탈면 해소방안
인테리어재료공학과	인테리어코디네이션	남해 SSG 투어 (Revival project)
건축공학과	공학입문설계	환경과 특색을 살린다.
텍스타일디자인학과	디자인발상기법	GNT LOCAL PROJECT
경영학과	시사금융특강	금융이슈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학과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지역사회 정신건강 실천 - 예방중심 문제해결 -
식품과학부	생애주기영양학	어린이집 어린이 대상 건강한 먹거리 교육
아동가족학과	언어지도	동화를 기반으로 한 언어교육 역량강화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조사론	진주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만족도 조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조사론	진주시 내 대학교 외국인 교환학생 지역사회 욕구조사
기계공학과	금형설계 및 실습	금형산업과 지역연계

USR 센터: 지역청년ship 펀드와 청년모델 수립

1. 지역청년ship 펀드

- 정의 : 지역대학 교육과 취업관련 실습은 청년들의 권리이며, 대학이 이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좋은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활동을 행하는 것은 의무라는 점에서 청년ship(Youth-ship)으로 정의
- 현실 : 등록금, 생활비를 위해 '알바'를 해야하는 상황. 4차산업혁명 대비 자격증 취득 비용을 조달할 수 없고, 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불가능
- 대안 : 알바 대신 지역사회 혁신 청년ship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청년수당, 공공기관 및 지역중소기업 직무교육 및 소셜벤처 활동 등)을 기금 형식으로 마련하여 지원, 2020년부터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프로그램으로 대학에서 청년수당 지급(계획)



USR센터: 지역청년십 펀드와 청년모델 수립

2. 지역청년십 펀드 활용 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 협력사업)

- 프로그램명: 경남지역 청년 공공인재 양성사업
- 목적: 알바 대신 청년십 활동 필요 비용(공공기관 및 지역중소기업 직무교육 및 소셜벤처 활동 등)을 기금형식으로 마련하여 지원
- 기간: 2018.8월~예산 소진 시까지
- 기대효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별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우수인재 발굴·채용 및 청년들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지원으로 지역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주요현황: 2019년 10월 현재 37,638,000원 지원

세부프로그램	평당금액	주요내용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희망펀드 지원사업	400백만원 (2018년)	· 구직활동 지원사업 · 취업역량 강화사업 · 공공인재양성과정	경남지역 만19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3. 지역청년 수당(2020년 예정)

- 재원: 지역청년십 펀드, 국립대학육성사업비
- 대상: 재학생에서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 대학생
- 목적: 지역대학의 청년들에게 소득 수분과 활동 유형을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
- 지향: 보편적 청년기본소득 지급

세부사업	예산 (천원)	조건		혜택
		참여활동	지원대상/조건	
G-주머니	200,000	-	소득: 0~1분위 성적: 3.0 이하	· 학기중(4개월) 월25만원 수당지급 · 산출내역 :250,000원/월×4개월×100명×2학기
G-Winner's	30,000	비교과 활동	소득: 0~2분위 성적: 3.0 이하	· 참여 활동에 따른 차등 지원
지역청년십 펀드 지원	35,000	교과이수 (지역공공인재 직무 교과)	전교생	· 출석 1시간당 10,000원 지급 (예 3학점 45시간 참여시 45만원)
합계	265,000			

USR센터: 지역공공인재 대학

4. 경남지역 공공인재 양성과정 운영(NCS등)

- 목적: 실질적인 NCS 교과목 개발, 운영으로 현장실무진과의 Co-Class, 집중이수제를 통한 실무 중심의 교육 운영

구분	교과목명	개설학기	학점	학습구분	수강인원		
					2018-2	2019-2	2020-1
교과	내지역공공인재직무(NCS)	2018-2, 2019-2	3	교양	15	18	-
	구매전문가 직무(NCS)	2018-2, 2019-2	3	교양	16	18	-
	온라인 마케팅 NCS	2019-1, 2020-2	1	교양	-	20	20
	KISTEC지역공공인재직무(NCS)	2019-2	3	교양	-	15	-
	전공융합 프로그래밍 배우기	2020-1	3	교양			20
	유튜브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	2020-1	3	교양			20
비교과	KISTEC 취업훈련과정	겨울방학(4박 6일)	-	-	12		

5. 사회가치혁신학교 운영(2020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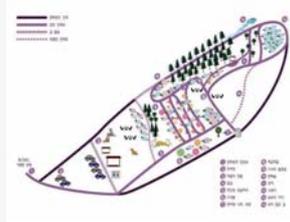
- 배경: 타 광역시·도에 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경남에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업무종사자, 시·군·구 기초단체 의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운영 및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대상
 - 경상남도 및 기초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 관련 임직원 및 부서 담당자
 -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관련 활동가 및 대학생

USR센터: 소셜랩 동아리

6. 소셜랩 동아리 지원

- 목적: 지역의 자원 및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팀활동
- 주요 내용
- 기대효과
 - 소셜랩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들의 사회혁신 마인드 제고
 - 경남과기대 홍보 효과 및 지역-학교 협력사례로 활용
 - 2019년 생활SOC무장애 서비스(팀명 : 작은 시선)

소셜랩 팀명	프로젝트명	참여인원	기간	주요내용	비고
에나블 (ENABLE)	제1회 고성 안화방초 수국축제	4	2018. 06. 22 (금) ~ 06. 24 (일) / 고성 안화방초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주제를 기획하고 실행	3일간 5,000여명의 관광객 방문
베노실	뫼지리 야외 도서관	6	2018. 10. 27(토)/경남과기대 2018. 10. 28(일)/롯데몰 진주점	'뫼지리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민들에게 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는 등 '역' 있는 문화를 조성	가족단위 300여명 참여
PERPETT	유기동물 인식개선 프로젝트	5	10/24(수) 사회적경제 한마당 10/27(토) 진주시민버룩시장	유기동물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 플리마켓 물품 판매	판매 수익 유기동물지원센터 기부



USR센터: 지역과 공존하는 비교과

7. 지역과 공존하는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진주시 공정무역 시민강사 양성과정	• 공정무역 소개 및 심화교육 및 강의 시연, 워크숍, 공정무역의 날 축제 견학	•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알리는 시민강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진주시민 30명
다문화사회에서의 젠더 감수성 키우기	• 성인지 교육을 통한 젠더의 기본소양교육, 동화로 만나는 젠더 감수성 교육, 젠더 역할극 교육 및 발표회	• 경남과기대 재학생, 이주여성, 지역민(2019년 200명)
세대융합 프로그램 - 우리동네 어른의 삶을 통한 우리 마을 알기 '동네살네'	• 우리동네(강남지구) 어른의 삶을 통한 우리동네 이야기 제작 및 출판기념회	• 경남과기대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민(2019년 10명)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 공정무역	• 공정무역의 기초 개념 이해와 공정무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환경, 상생, 인권, 소통, 나눔 등) 발견	• 지역내 초중고(2019년 5회 및 진주중 3학년 등 350명)
디지털 소양 교육 - 스마트한 생활을 위한 PC & 모바일 활용기초 교육	- PC활용방법, 문서작성 기초,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 경남 시민 15명 내외(경력단절여성, 다문화 여성 우선 배정)

USR센터: 소셜프랜차이즈 창업_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 사업

8. KAI_GNTECH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 프로그램명: KAI_GNTECH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 주요 내용: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및 멘토링, 창업사업화 지원
- 사업 목표: 소셜프랜차이즈 창업 2건, 기업-대학간 협력 사회적 가치 확산
- 경과: 2018년 총 30명에 대한 2차례 교육을 통해 10팀 선정, 3차 교육 후 최종 2팀 선정, 2개팀 역량 강화 및 지원 중
- 펀드조성 금액: 2018(5천만원), 2019년(7천만원), 2020년(5천만원) 등 총 1억 7천만원 지원
- 창업기업
 - 와로 샐러드랑 :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그 기반을 제공하는 샐러드 소셜 프랜차이즈
 - 아도락 :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시아도시락 소셜 프랜차이즈



USR센터: 공정무역대학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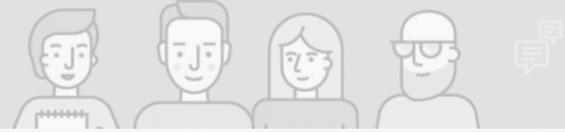
9. 전국 최초 공정무역대학

○추진 배경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사회적활동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여건 마련으로 공정무역의 가치 확산과 활성화,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대학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
- 공정무역대학 선언(2019년 5월)으로 지역사회에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
- 전국대학 최초로 공정무역대학 인증(2019. 12.16)
-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연계하여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제고 및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 참여 유도

구분	프로그램명	참여인원(명)	비고
교과	글로벌 사회적경제와 공정무역(2019)	18	사회적경제 연계전공 3학점/전공선택
	사회적경제와 국제개발협력(2016)	10	
	사회적경제와 국제개발협력(2018)	35	
비교과	진주시 공정무역 시민양성 과정(신청 37명, 수료 27명)	37	교사, 사회적경제 시민사회단체, 기업(LH), 진주시, 대학
	세계공정무역의 날 축제 참관	47	공정무역 시민강사 양성과정 수료생, 진양고 및 경남과기대 재학생
	돛자리 야외 도서관	5	공정무역 그림그리기 대회시 공정무역 도서 관련 운영
	진주시 유등축제 활용 공정무역캠페인(2019. 10.12)	30	진주공정무역마을만들기 추진위, 진양고, 진주아이클 생협, 아름다운가게
	해외 연수	16	사회적연계전공 교과 연계 비교과 활동
	필리핀 공정무역 연수 (2016)	16	
연수	필리핀 공정무역 연수(2019)	7	

USR센터: 공정무역대학 추진



○ 활동 및 향후 계획

- 2019년 공정무역대학 MOU 체결 및 선언(2019년 5월 25일)
- 진주시 공정무역 조례 제정 추진(진주시)
- 공정무역 관련 지역사회 협력: 교육(진주공정무역마을 만들기 추진위), 공정무역의 날 행사 참여(한국공정무역협의회), 자유학기제
- 한국방송대학교 공정무역 관련 교육콘텐츠 활용 교육(비교과 인증제와 연계)과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 대학공정무역 활성화 추진위 구성(총 15명, 외부위원 8명)
- 교내 공정무역제품 사용(커피 자판기) 및 판매(편의점)
- 공정무역대학 인증 심사 (2019년 11월)
- 전국최초 공정무역대학 인증(2019.12.16)
- 구 법원부지(검찰청사 부지) 내 공정무역 카페 운영 예정



‘사회적경제 교육기반 사회적가치 실현제고’ 맵핑



MEMO

MEMO